2007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주요내용

7.11(수) 오전 국민경제자문회의(총리주재)를 거쳐 발표될 예정인 '2007 하반기 경제운용방향' 주요내용을 보고드림

- 유가상승폭 확대에도 불구, 예상보다 빠른 내수회복세와 수출호조를 반영하여 **2007년 성장 전망치**를 당초 4.5%→**4.6%로 상향조정**

  * 최근 삼성연, 현대연 등 민간 연구기관들은 금년 성장률 전망치를 4.2~4.3%→4.5%로 상향

- 하반기 경제운용의 중점은 **ⅰ) 경기회복기조 지속, ⅱ) 서민생활 안정, ⅲ) 법·제도·시스템 선진화 기반 확충 ⅳ) 부동산 및 금융·외환시장 등의 위험요인 관리**에 둠

< 목 차 >

Ⅰ. 상반기 경제운용 실적

Ⅱ. 2007 경제전망

Ⅲ. 하반기 경제운용의 기본방향

Ⅳ. **하반기 중점추진과제**

1. **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**
2. **한미 FTA 후속조치와 제도·시스템 선진화 추진**
3. **기업환경 개선 및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**
4. **금융산업 발전기반 확충**
5. **서민생활 안정 도모**
6. **부동산시장 안정기반 확립**
7. **참여정부 로드맵 과제 마무리**

(2007.7.10, 2007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주요내용, 경제정책비서관실)

Ⅰ. 상반기 경제운용 실적

◇ 상반기중 경제의 안정관리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

(i) 거시정책을 경기보완적으로 운용하고, 금융·외환·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

(ii) 규제개혁을 통해 투자를 활성화하고,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시책을 수립·추진

(iii) 한·미 FTA 체결 등 경제시스템 선진화 및 대외개방을 확대하고, 미래대비 노력을 강화

□ (정책과제 1)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

○ 上低下高의 경기전망에 대응하여 상반기중 56% 수준을 목표로 재정 조기집행 추진

* '07.5월말 재정집행 진도율은 45.7%로 작년 동기 수준(42.8%)을 상회

○ 「11.15 방안」, 「1.11 대책」 등 그간 마련한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인 안정세 유지

* 수도권 아파트 가격상승률 추이
: 7.9% ('06.상반) → 15.5% ('06.하반) → 2.4% ('07.상반)

○ 국내 유동성, 단기외채 급증 및 공기업 등의 환위험 노출 등 불안요인에 적절히 대응

* 금융상황점검회의 정례 개최(월1회), 기업의 대외진출 촉진과 해외투자 확대 방안마련('07.1.15일) 등

□ (정책과제 2) 투자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

○ 1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*('06.9월),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**('06.12월)상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

* 총 68개 단기과제 중 67개 과제 완료 (07.6월기준)
** 총 54개 단기과제 중 29개 과제 완료 (07.6월기준)

(2007.7.10, 2007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주요내용, 경제정책비서관실)

○ 기업현장 **심층 실태조사, 의견수렴** 등을 토대로 **2단계 기업환경 개선 종합대책 수립**('07.6.25)

○ 대규모기업집단시책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한 **공정거래법 개정** ('07.4.13. 공포)

* 출총제 대상 축소(자산 6조원 이상 → 10조원이상), 자회사·손자회사 지분율요건 (상장 30%→20%, 비상장 50%→40%) 완화 등

□ **(정책과제 3) 서민경제의 안정**

○ **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확충** 기반*을 조성하고, 재정에서 **사회서비스 일자리 14.5만개 지원**('07.5월말 현재, 올해 목표 20.1만명 대비 72.2%)

*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('07.4.2),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('07.7.1) 준비 등

○ **서민금융기관의 기능제고, 대안금융 활성화, 대부업 감독제도 개선** 등 서민금융 대책 추진

* 휴면예금법 국회 통과('07.7월), 대부업 최고이자율 인하(변경전 70%→ 변경후 60%, '07.6월 대부업 정책협의회) 등

○ **공교육 내실화**, 수강료 표시제 시행('07.9월) 등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**「사교육 실태 및 대책」**('07.3월) 마련

□ **(정책과제 4) 경제시스템의 선진화・투명화**

○ 자본시장 선진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**자본시장 통합법 제정**('07.7월)

* 자본시장 통합법 관련 하위법령(시행령・시행규칙・고시・감독규정)도 기능별로 묶어 단일법령으로 통합・개편 추진

○ 하위법령 제・개정 등 **비정규직 보호법의 원활한 시행**('07.7.1)**을 위한 여건 조성,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전환**(7.2만명) 추진

* 공개토론회 2회, 전문가 등 간담회 7회, 관계부처 협의(3.28~4.6), 노사정 협의 6회, 국무회의 의결(6.12)・공포(6.18)

○ **대형R&D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**를 본격 시행('07.1월), 범부처 **연구시설・장비 공동활용 촉진 세부추진방안** 마련('07.5월)

(2007.7.10, 2007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주요내용, 경제정책비서관실)

○ 공공기관 운용시스템 혁신을 위한 **「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」** ('07.1월) 및 시행령('07.3월) 제정・공포

□ **(정책과제 5) 대외개방 및 협력 강화**

○ '06.6월 이후 총 8차례의 협상을 거쳐 **한・미 FTA 협상을 타결** ('07.4.2)하는 등 **FTA 허브국가**로서의 위상을 강화

- **협상결과에 따른 경제적 효과분석**을 실시('07.4.30), **피해지원과 산업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보완대책** 마련('07.6.28)

○ ODA 확대계획에 따라 **07-10년간 2.4조원 수준의 대외경제협력기금** (EDCF) **승인**('07.2.14일, EDCF 기금운용위원회의)

□ **(정책과제 6) 미래에의 대비 강화**

○ 인적자원 활용 등 주요 핵심과제에 대해서는 **입법 및 장기계획 수립, 제도개선 조치 등을 완료**

- 「비전 2030,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만들기 전략」을 발표('07.2.5) 하고 **7개 주요과제**에 대하여 세부계획을 마련('07.5.17)

* 전문계고 육성방안(교육부), 고등교육 혁신(교육부), 임금・고용형태의 유연성 제고(노동부), 인적자원에 대한 건강투자 강화(복지부) 등

- 경쟁력 제고를 위한 **정부지원 확대**('08년 1조), **기회균등할당제** 도입, 재정능력 확충을 위한 **대학자산 규제완화** 등 **「고등교육의 전략적 발전방안」마련**('07.6.26)

- 국민연금의 **재정안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**('07.7.3)

○ **기업하기 좋은 여건과 사람 살기좋은 환경** 조성을 위한 **「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구상*」** 발표('07.2월)

- '기업대책'과 '사람대책'의 2개 부문 14개 정책과제로 구성

* 기업대책은 세금부담・인력난・부지문제 해결에, 사람대책은 지방의 주택・교육・의료・복지 등 기본적인 생활서비스 기반 확충에 중점

(2007.7.10, 2007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주요내용, 경제정책비서관실)

Ⅱ. 2007년 경제전망

1 **(성장)** 유가·환율 등 **대외여건이 안정적**으로 움직이고 **내수회복세**가 이어지면 **당초 예상**(4.5%내외)**보다 다소 높은 4.6% 수준**의 **성장세 예상**

* 연중 경기흐름은 당초 예상대로 上低下高의 흐름속에 상반기 4%대 초반, 하반기 4%대 후반 성장 예상

○ **민간소비**는 고용과 임금 등 **가계소득여건 및 소비심리의 개선** 등에 따라 당초 예상을 소폭 상회하는 **4%대 초반** 증가 전망

○ **설비투자**는 **자본재 수입 등 양호한 선행지표 추이** 감안 시, 당초 예상을 소폭 상회하면서 **8%대 초반의 증가 흐름**을 지속할 전망

○ **건설투자**는 2년 연속 감소세에서 벗어나 **증가세로 전환**될 전망이나, 주거용 민간건설 부진 등으로 **큰 폭 회복은 어려울 가능성**

○ **수출**은 견실한 세계수요 등에 따라 **두자리수 증가세가 지속될 것이나**, **수입**이 내수회복세, 유가 상승 등에 따라 당초 예상보다 **증가세가 확대**되어 **순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다소 하락** 전망

2 **(고용)** 당초 예상과 같이 **30만명 내외 취업자 증가** 전망

○ **내수회복세, 사회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한 일자리 재정 사업** 등이 하반기 고용에 **긍정적**인 영향을 미칠 전망

3 **(소비자 물가)** 당초 예상을 하회하는 **2%대 중반(2.5% 내외)에서 안정**될 전망

○ 하반기로 갈수록 **고유가 등에 따른 물가압력**은 커질 수 있으나, **전반적인 물가안정세는 지속**될 것으로 예상

4 **(경상수지) 균형수준으로 수렴**할 전망

○ 서비스 수지를 중심으로 **상품외수지 적자의 확대 추세**가 지속되고 수입 증가 등에 따라 **상품수지 흑자폭이** 당초 예상보다 **다소 축소**될 것으로 전망

(2007.7.10, 2007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주요내용, 경제정책비서관실)

<2007년 경제전망 수정치>

	2006년 실적	2007년 전망	
		당초(07.1)	수정(07.7)
▪ 경제 성장률(%)	5.0	**4.5 내외**	**4.6 수준**
▪ 취업자 증가(만명)	30	**30 내외**	**30 내외**
▪ 소비자 물가(%)	2.2	**2.7 내외**	**2.5 내외**
▪ 경상수지(억불)	61	**10 내외**	**0 내외**

참 고 대내외 여건 변화 및 성장률 전망

1 성장률 상향 요인

① **(세계경제 하방위험 감소)** IMF는 **수정전망**에서 4.9%의 세계 경제 성장전망을 유지했으나, **당초에 비해 하방위험이 다소 줄었다**고 평가

② **(내수회복세)** 금년 들어 **내수회복세가 당초 예상보다 다소 빠르게** 진행

③ **(수출증가세 확대) 수출증가세가 다소 확대**(10%→ 12~13% 내외)**될 전망**

2 성장률 하향 요인

① **(국제유가) 상승폭이 당초 예상보다 확대**될 것으로 전망

* 국제유가 전망(Dubai기준, $/b) : (당초)58 → (수정)62

② **(내수회복에 따른 수입 증가) 내수회복세**에 따라 **수입이 당초 예상**(10%내외)**보다 증가**(13%내외)할 것으로 전망

3 종합 판단

○ **유가 상승, 수입 증가 등 성장률 하향조정 요인**이 있으나

○ **소비·투자 등 내수의 회복세가 지속**될 가능성이 높고 **수출도 호조세**를 보이고 있는 등 **상향조정 요인이 다소 우세**

Ⅲ. 하반기 경제운용의 기본방향

1 그간 추진해 온 **경제안정 및 성장잠재력 확충** 노력을 지속하여 **참여정부의 남은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**

○ **경기회복기조를 지속**하고 **서민생활을 안정**시키기 위한 거시·미시적 대응 추진

○ 중장기 **구조개혁의 차질 없는 추진**, 한미 FTA 체결을 계기로 한 **법·제도·시스템 선진화**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 확충에 만전

2 이러한 목표 하에 **다음의 과제들에 특히 역점**

○ **(거시경제 안정) 금융·외환시장의 안정세를 유지**해 나가는 가운데 경기회복 흐름에 맞추어 **거시정책기조를 미조정**

○ **(한·미 FTA) 국회 비준 동의절차와 국내 보완대책 등을 차질 없이 추진**해 나가면서 FTA를 계기로 성장잠재력를 높이기 위한 **법·제도·시스템 선진화방안 마련**

○ **(기업환경·서비스경쟁력) 기업환경 개선 및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**대책을 **차질 없이 시행**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**정보통신기술의 활용도 제고** 노력 강화

○ **(금융산업 발전기반 확충) 자본시장을 선진화**하고 **금융 겸업화·개방화에 대응한 제도적 기반 마련**

○ **(서민생활 안정) 유가상승 등으로 어려움**을 겪고 있는 **영세 자영업자·지방건설업체 등에 대한 보완대책** 강구

○ **(부동산시장 안정) 공급확대·투기억제·분양가제도 개선** 등 시장안정을 위한 **기존 정책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**

Ⅳ.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

1.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

◇ **금융·외환시장의 안정기조를 확립**해 나가는 가운데, **경기 회복 흐름을 보아가며** 거시정책기조를 **미조정**

(1) 거시정책의 탄력적 운용

1 **(재정정책) 예산집행 점검** 등을 통한 **경기안정 노력 지속**

○ 조기집행 등으로 하반기 세출여력이 크지 않음을 감안, **재정이 경기긴축적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리**하는데 중점

* 하반기 주요사업비 예산(조원) : ('06년) 86.9 → ('07년) 87.7

- 계획된 예산을 정상적으로 집행하여 **이월·불용을 최소화**

- **기금자산의 적극적 운용**을 통한 투자활성화, **공기업 투자의 차질 없는 추진** 등 세출보완 방안을 모색

○ **향후 세입 및 경기회복 상황**을 보아가며 **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용**

- 세입에 여유가 있을 경우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**적자국채 발행을 당초 계획보다 축소**

* '07년 적자국채 예산 8.0조원중 현재까지 6.7조원 발행

2 **(통화정책)** 한국은행에서 **물가, 경기** 및 **금융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운용**

3 **(외환정책) 지속적인 해외투자 촉진** 등 외환수급 조절을 통해 환율이 거시경제 상황과 괴리되지 않도록 **안정화 노력 지속**

○ **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 강화** 등을 통해 원화절상 기대심리를 완화하고, **Smoothing Operation 등 단기 안정화 조치**도 병행

○ **과도한 캐리 트레이드**로 인하여 국제금융시장이 교란되지 않도록 **국제적 공조를 강화**하여 **선제적으로 대응**

(2007.7.10, 2007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주요내용, 경제정책비서관실)

(2) 금융·외환시장의 안정기조 확립

1 (**중소기업 대출**) 대출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에 활용되도록 **건전성 관리를 강화**하고 **대출동향에 대한 점검 지속**

○ **업종별 리스크 분석, 용도외 유용 점검 강화** 등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건전성 점검을 강화

○ 중기대출의 증가속도 등 **시장상황을 보아가며 필요시 적절한 정책수단**을 **검토**

2 **(단기외채) 외환건전성지도 및 모니터링을 지속**하는 한편, **단기외채를 적정수준으로 조정**해 나가는 방안 강구

○ 은행 **외화대출에 대해 신·기보 보증 출연료를 부과**('07.7월 시행)

○ 해외차입 유인을 축소하기 위해 **원화 사용목적의 외화대출을 억제**하고, **시장 친화적인 외채관리 방안 마련**

3 **(리스크 대응체제 강화)** 금융·외환시장의 **위험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·관리를 강화**

○ 외화대출이 많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**환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**하고 필요시 **적절한 관리방안 강구**

○ 속보성·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시장지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**상황변화를 조기에 인지**하고, 관계기관간 **협의채널**(금융상황점검회의 등)**을 통해 신속히 대응**

○ 주택담보대출 규제(LTV, DTI), 저축은행 PF대출 규제 등을 감독규정에 반영 하는 등 **금융시장 안정조치의 법규화·제도화 추진**

2. 한·미 FTA 후속조치와 제도·시스템 선진화 추진

◇ 한·미 FTA의 **국회 비준 동의절차를 조속히 마무리**하고, **국내보완대책**과 함께 **법·제도·시스템의 선진화방안 추진**

(2007.7.10, 2007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주요내용, 경제정책비서관실)

(1) 조속한 한·미 FTA 비준을 위한 노력

1 **(비준동의 여건조성) 대국회 직접 홍보·정보제공 활동** 강화

○ 국회비준 동의를 위한 **단계별·시기별 활동계획**을 수립, **추진**

< 단계별 주요 추진사업(예시) >

- **협정문 체결 및 비준 준비기**('07.7.1~8월말)
  · 국회의원 대상 맞춤형 방문 설명팀 운영
  · 국회 내 주요 인사를 중심으로 비준 추진동력 지원
- **통외통위 의결기**('07.9월~10월 중순)
  · 위원, 전문위원 등 대상 초청설명회 개최
- **본회의 의결기**('07.10월 중순~12월 중순)
  · 비준 관련 국회 내외 여론 조사 (10월중)
  · 국회비준을 위한 의원 초청 간담회 개최

2 **(홍보강화) FTA 협상결과와 보완대책에 대해 적극 홍보**

○ 지역별·업종별 **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**을 통한 FTA **지지 여론 확산활동 강화**

* 지역별 한미FTA 세미나·설명회 개최, 학계·시민단체등과 연계한 지역별 한미FTA 활용 극대화 방안 관련 토론회 개최 등

- 특히, 정책수립 및 향후 점검 과정에서 **FTA 국내대책 위원회**를 중심으로 각계의 **참여폭을 확대, 여론 수렴 활동 강화**

(2) 후속 FTA의 추진 가속화

1 **(한·EU FTA)** 연말까지 **3~4차례의 공식협상을 개최, 조속한 타결 추진**

2 **(기타 FTA) ASEAN**(서비스·투자협정)·**캐나다·인도**와 '07년내 **협상타결**을 추진하고, **멕시코·일본**과는 협상을 재개할 수 있는 **여건 조성에 노력**

3 **(FTA 사후관리)** FTA별로 관세 철폐·인하에 따른 **수출입 규모 및 구조의 변화**를 수시로 점검하는 한편, **서비스·투자 등 여타 분야에 대한 파급효과**도 분석·평가

(2007.7.10, 2007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주요내용, 경제정책비서관실)

(3) 국내보완대책('07.6.28 旣 발표)의 차질 없는 추진

1 **(피해지원)** 농·수산업 등 **직접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지원**

○ **농·수산업** :「FTA 농어업특별법」에 따라 **품목별 피해보전 직불제 및 폐업지원제도 개편**을 통해 피해보전 지원

○ **제조업·서비스업** : **무역조정제도 확대 개편**을 통해 **자발적 구조조정 지원을 강화**

○ 전직지원서비스 강화 등 **고용안정 지원기능을 확충**

2 **(경쟁력 강화) 품질 고급화·현대화** 등을 통한 **경쟁력 강화** 및 규제개선 등을 통한 **기업 친화적 경영환경 조성**

○ **농·수산업** : 한우 우수브랜드 육성 등 **품목별 경쟁력 강화 대책 및 종자·종묘산업 육성** 등 **산업전반의 경쟁력 강화** 추진

○ **제조업·서비스업** : **제약업 및 조기개방 업종**(정밀기계·정밀화학 등)에 대해 R&D **등 지원을 강화**하고 기업환경을 개선

3 **(농어촌 소득기반 확충)** 도시자본의 농어촌투자 촉진, 지역산업·관광산업 육성 등 **농어촌 경제 활성화와 소득원 다변화 추진**

4 **(후속조치사항)** 소득보전·폐업지원제도와 무역조정제도 개편을 위해 **『FTA농어업특별법』, 『무역조정지원법』 개정 추진**('07.하반기)

(4) 한·미 FTA를 계기로 한 제도 선진화 작업 가속화

1 **(외환관련 규제)** 자본의 보다 원활한 이동을 위해 국제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**외환관련 규제의 조기 완화방안 마련**

○ **대외채권 회수의무 면제 허가제*, 지급수단 수출입시 허가제**를 **신고제 전환** 등

* 비거주자에 대한 건당 50만불이상 초과 대외채권의 경우 1년 6개월이내에 회수하여야하며, 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한은 허가 필요

** 100만불 초과 지급수단 수출입시 한국은행 또는 세관 허가 필요

2 **(노동력 이동)** 전문인력 유입 등을 촉진하기 위해 **노동력의 국경간 이동**(migration) **관련 제도 정비**

○ 전문외국인력에 대한 **영주자격 요건을 단계적으로 완화, 체류자격 변경만으로 취업을 허용**하는 외국인 졸업생의 범위 **확대**

○ '**외국인 정책위원회**(위원장:국무총리)'를 중심으로 **노동력의 국경간 이동에 관한 종합적인 로드맵 작성** 착수

3 **(경쟁촉진)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**

○ 수평적 가격담합에 대해 **당연위법 원칙**(per se rule)**이 확립**되도록 **공정거래법**(제19조) **적용 강화**

○ 대외개방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**국제 카르텔에 의한 경쟁제한 행위 감시역량 강화**

4 **(법적안정성 제고)** 국내 입법 및 제도 개선시 **일반의 참여 확대**

○ **행정절차법 개정**을 통해 **입법예고기간을 연장**(20→40일)

○ ISD 도입에 대응하여 **대중참여확대제도**(환경분야), **공중의견 제출제도**(노동분야)등을 **활용, 정책투명성 제고**

5 **(해외자본·기술 도입) 외자·선진기술 도입의 확대 유도**

○ 첨단산업 등 **핵심 주력업종을 타겟팅하여 유치노력 집중**

○ **다국적 기업의 R&D센터 유치 노력**을 강화하고 국내기업의 **글로벌 R&D 활동에 대한 지원**방안 강구

6 **(기업의 대외진출 지원 강화)**

○ **해외건설펀드·광물펀드의 조성, 수은의 해외투자자금 공급 확대** 등 국책은행의 금융지원 강화

○ **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의 적용 확대,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에 따른 구상채권 대손 허용** 등 세제지원 강화

○ 공기업 해외진출에 대한 **국내외 모범사례 공유 기능 강화**

3. 기업환경 개선 및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

◇ **기업환경개선 및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차질없이 시행**하고 산업 전체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**정보통신기술 활용도 제고방안도 마련**

(1) 기업환경 개선

1 **(기업환경개선대책 추진)** 최근 발표된「**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**」('07.6.25) 등에 역점을 두어 착실하게 추진

< 주요 내용 >

- 은행, 보험, 상호저축은행, 연기금의 벤처펀드 투자 확대
-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펀드(1조원) 조성
- 계획관리지역내 소규모 공장(1만㎡ 미만) 설립 원활화
- 상수원보호구역, 농업용저수지 상류방향 입지규제 합리화
- 농어촌 시·군별 농공단지 조성 지정면적 확대
- 산업단지내 직장보육시설 지원요건 완화
- 산학 협력단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대학기술의 산업화 지원
- 창업 벤처기업의 세액감면 요건 완화
- 개성공단 투자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
-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서비스 손금산입 등 기업의 대외진출 촉진
- 반도체 기존공장의 구리공정 전환관련 방안 조기 결정
-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·등록세 감면기간 연장
- 도산, 신탁, 담보 관련 기업법제 선진화 과제의 추진

○ **차질없는 대책 추진**을 위해 **분기별로 이행실태를 점검**하고 집행과정상 **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조치**를 통해 해소

- **기업법제**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중인 전문가 용역 결과, 법무부「기업법제 개선팀」논의 결과 등을 기초로 **'07년말까지 구체적 도입방안 마련**

2 **(세제지원)** 중소기업의 승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**가업 승계에 대한 세제지원제도 개선**

(2007.7.10, 2007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주요내용, 경제정책비서관실)

(2)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

1 **(기존 대책의 점검·보완)** '06.12월 발표된 「**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**」과제*들을 **내실 있게 추진**

* 제조업과의 차별시정, 세제·금융지원 등 경영환경 개선, 디지털방송·모바일 서비스 등 유망 서비스업종 육성, 관광·교육 등 서비스수지 적자분야의 경쟁력 강화

2 **(2단계 종합대책)** 한미 FTA 체결 등 개방확대에 따른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「**제2단계 종합대책**」을 수립('07.7월말 발표)

○ **해외소비 국내 전환**을 위한 **관광·레저 분야의 대책**과 **서비스산업 생산성 향상**을 위한 **정책적 지원방안** 등을 중점 추진

○ **대책의 추진상황**을 **분기별로 점검·보완**하고, **중장기 검토 과제**도 **관계부처 TF 구성·운영** 등을 통해 **조기에 구체화**

< 주요 내용 >

① 관광·레저 분야의 해외소비 국내전환 촉진

○ 골프, 크루즈, 요트 등 소비 고급화 추세에 적합한 레포츠 산업 육성기반 마련

②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생산성 제고

○ **업종간 융합분야***에 대한 **규제정비 및 표준제정**

* IPTV, u-City건설, 교통카드 등

○ **전자문서 유통성을 확보**하기 위해 **전자결재·인증제도 활성화**

○ **RFID/USN*** **핵심분야**(유통·물류, 농수산, 기상, 안전관리 등)에 대한 **부처간 공동사업 추진**('08) 및 **표준가이드라인 개발·배포**

* RFID/USN :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/Ubiquitous sensor network

○ **IT 관련 서비스의 표준제정**(예:u-payment, IC카드 등) 확대

③ 주요 지식기반서비스 업종의 경쟁력 강화

○ **금융·물류 허브** 조기구축을 위한 제도혁신, 방송·통신·문화컨텐츠·디자인 등의 **중장기 경쟁력 강화과제 발굴**

* 통신: 통신규제정책 로드맵 추진, 문화컨텐츠: 전통문화원형사업 추진 등

4. 금융산업의 발전기반 확충

◇ **자본시장 선진화 노력**과 함께, **은행·보험업 제도와 규율 체제 개편** 등 금융산업 전반의 제도개선 작업을 가속화하고 금융산업 **해외진출을 지원**

(1) 자본시장의 선진화 기반 마련

1 **(법령 정비등 후속조치)** 자본시장통합법의 **하위법령·규정 등을 기능별로 묶어 통합·개편** 추진

○ 상위법령의 **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실효성이 떨어진** 규제 일괄 정비

○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대비하여 투자은행업무 활성화, 펀드 규제 완화 등 **중장기 자본시장 발전전략**을 민간과 함께 마련

2 **(자본시장 저변 확충) 주식공급을 확대**하고 **수요기반도 확충**

○ **우량 공기업·생보사 및 증권거래소 상장, 해외기업의 상장 유도** 등을 통해 양질의 주식공급을 확대

○ 국민연금 등 **연기금의 자본시장 참여를 점차 확대**

3 **(전자증권제도 도입)** 증권발행·유통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**전자증권제도 도입**을 추진

4 **(자산운용 혁신) 합성 담보부증권**(CDO) 등 새로운 ABS 발행이 **가능토록 제도를 개선**하고, **헤지펀드 도입을 위한 로드맵** 마련

5 **(증권거래수수료 개편)** 거래대금에 주로 연계되어 있는 증권선물 유관기관의 수수료 체계를 **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보완**

(2) 겸업화·개방화 등에 대응한 제도적 토대 마련

1 **(은행·보험)** 자본시장통합법 제정, 금융겸업화 확대 등에 맞추어 **은행·보험제도를 전면 재정비**

○ 은행의 수익모델 다변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은행제도 보완·정비

(2007.7.10, 2007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주요내용, 경제정책비서관실)

○ 보험산업 내외의 칸막이와 업무구분을 완화, 보험산업을 **"종합적 자산 및 리스크 관리산업"**으로 집중 육성

2 **(국책은행)** 국책·민간 금융기관이 **효율적인 보완관계를 유지** 할 수 있도록 국책은행의 역할을 재정립

○ **금융투자회사 발전**에 산은 등 **국책은행이 선도적 기능 수행**

○ **"국책은행 정책금융심의회"**를 금융발전심의회 내에 설치하고 국책은행의 역할·기능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

(3) 금융시스템의 효율화를 위한 금융인프라 확충

1 **(국제회계기준)** 「국제회계기준 수용을 위한 로드맵」에 따라 **회계 관련 법령**(외감법, 증권거래법)**을 단계적으로 정비**

2 **(예금보험)** 예보의 연구용역('07.4월)을 바탕으로 **목표기금제** 등 금융기관의 건전경영과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**예보제도 개선**

(4) 금융산업 해외진출 지원

1 **(지원시스템) 금융산업 해외진출전략위원회·금융중심지지원 센터** 등을 통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지원시스템 구축

2 **(규제 완화)** 금융산업 해외진출 관련 **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**

○ 금융지주회사의 외국금융기관 자회사 편입 허용, **금융회사의 해외점포 설치**시 신고수리기간 단축

3 **(리스크 관리)** 금융산업 **해외진출 증가에 따른 리스크 관리 강화**

○ 한국투자공사(KIC)는 **해외직접투자를 개시**(약 10억불)하고, 투자대상 제한 완화 등 **자산운용의 자율성을 강화**

○ 산업은행 주도로 「**아시아 구조조정·경제개발 PEF**」를 설립 하는 등 민간과 공공의 공동투자기회를 마련

(2007.7.10, 2007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주요내용, 경제정책비서관실)

5. 서민생활의 안정 도모

◇ **유가상승**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**영세자영업자·지방건설업체·중소기업 등에 대한 보완대책**을 강구

1 **(유류비부담 완화) 영세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 경감**방안 강구

○ 서민용 연료인 **등유에 부과되는 특소세**(134원/ℓ) **조정 및 판매부과금**(23원/ℓ) **폐지**

○ **유류비 비중이 높은 업종, 불황업종**을 대상으로 **단순 경비율 인상**

- **대상자** : 이삿짐센터, 용달서비스업, 폐기물수집처리업 등 250여개 업종(전체 업종의 1/3수준)의 영세자영업자*

* 개인서비스업(36백만원 미만), 제조업(48백만원 미만), 도매업 (72백만원 미만)

○ 화물차 등을 보유한 영세사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**환경개선부담금 경감 방안 마련**

* 부담금 예시(1톤트럭, 서울 기준) : 연 13만원
**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('06) : 연간 4,300억원 징수

2 **(유류관련 제도개선)** 정확한 유가정보제공, 유통질서 확립 등을 통한 **소비자 선택 기회 확대**

○ 석유제품 **가격모니터링제도 개편***, 전국의 주유소 **가격 인터넷 공개 서비스** 시스템 구축 추진

* 공장도가격이 아닌 실제 판매가격을 조사·발표

○ **셀프주유소 활성화 유도, 유사석유제품 유통 근절대책** 등을 지속 추진하고, **경차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* 제공방안 강구**

* 경상용차에 대한 취득세·등록세 감면, 경차 개발에 대한 세제지원 등
* 경차보급률(%) : ('00년)8.2→('03년)7.2→('06년)6.5 일본(06년)26.3

3 **(서민금융) 대부업 제도개선,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 개선, 대안금융** 등을 통해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

○ **대부업 최고이자율 상한을 인하**(66→49%)하고, **집중단속**('07.8월), **실태조사**('07.10월), **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**

(2007.7.10, 2007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주요내용, 경제정책비서관실)

○ 사회투자재단, 휴면예금관리재단 등 **공익기금 설립**을 통해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**금융수혜 기회를 대폭 확대**

- **저소득층 창업·취업지원** 등 소액신용대출, **보험가입 지원**, 장기의료비·교육비 대출 등 **마이크로 파이낸스 제공**

* 사회투자재단은 금년중, 휴면예금관리재단은 '08.2월 설립 추진

○ 원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**가맹점의 對카드사 협상력 제고 방안 등 가맹점 수수료 체계의 합리화 방안**을 마련

4 **(지방 건설업체) 지방중소건설업체에 대해 공공분야의 수주 지원을 강화**('07.3/4분기까지 국가계약법시행령 등 개정)

○ 대형업체가 주로 참여하는 **턴키·대안입찰방식 적용대상을 축소**(현행 100억원→300억원)하여 중소기업의 수주영역 확대

○ 지역의무 공동도급*시 **지역업체의 최소참여지분율 상향조정** (현행 10%→30%)

* 타지역 업체의 경우 당해지역 업체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해야 하는 제도

○ 혁신도시사업 추진시 **지역업체에 할당*되는 사업규모를 상향조정**(50억원이하→100억원이하)

5 **(수출중소기업)** 환율절상 등으로 인한 채산성 악화 보완

○ **무역금융·수출관련대출 보증**(70억원 한도) 등 수출보증 지원 지속

○ 수출 중소기업의 **원자재 수급애로 완화**를 위해 '**중소기업 협동조합 전용 공동사업자금***'(300억원)을 지원

○ **옵션형 환변동보험 가입 확산·수출중소기업 선물환거래 증거금 인하**(2.2%→1.1%) 등을 통해 환위험 관리역량 제고

6 **(재래시장) 시장·상점가를 연계하여 지역중심 상권을 개발**

○ 시장과 시장이 인접한 「**시장활성화구역**」, 시장과 상점이 인접한 「**상권활성화구역**」을 지정, **지역별 중심 상권으로 육성**

* 5개 시범구역을 선정하여 공동마케팅 지원('07년)

(2007.7.10, 2007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주요내용, 경제정책비서관실)

7 **(사회서비스 일자리)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의 성과 제고**

○ 사회서비스 사업을 **양질의 일자리, 성장가능성이 높은 자립 지향형 사업**(기업연계형 등) **중심으로 개편**

- 사회적기업에 대해 **인증제도를 도입**하고 **세제지원방안** 강구

○ 특별점검단을 통해 **집행실적을 매월 점검**

6. 부동산시장의 안정기반 확립

◇ 부동산시장 안정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**기존 대책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**

1 **(공급 확대) 시장에 제시한 공급확대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**

○ **'07년 주택건설 목표**(수도권 29.7만호, 전국 53만호)를 **달성**

* 수도권 주택공급계획(11.15 대책, 만호) : 29.7('07) →39.2('08)→ 36.4('09)→ 40.3('10)

○ **공급계획 애로사항은 「관계부처 택지 T/F」**를 통해 **적극 해소**

*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간 중복사항 간소화(환경부), 군시설 관련 협의기간 단축(국방부), 문화재 지표조사 기간 조정(문화재청) 등

○ **동탄2지구 신도시**(21.8㎢) 및 금년 계획된 **택지확보를 차질 없이 이행**

* '08.2월 개발계획 확정, '10.2월 주택분양, '12.9 이전 입주

2 **(분양가 제도) 「1.11 대책」 통해 제시한 개선 방안** 본격 시행

○ **'분양가 상한제'로 평균 20% 이상 저렴한 신규 주택**을 공급하고, **'분양가 내역공시'**를 통해 **국민에게 정보를 충실히 제공**

○ **실수요자를 우대하는 '청약가점제'** 실시('07.9월중)

○ **환매조건부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** 시범실시

3 **(투기 억제) 旣 마련한 투기억제 시스템**을 흔들림 없이 추진

(2007.7.10, 2007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주요내용, 경제정책비서관실)

○ 고가주택·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**종부세·양도세 중과, 주택 담보대출 규제** 등을 일관되게 유지

○ 채권보상 활성화 등 **토지보상제도 개선방안**('07.7.6일)**을 차질 없이 추진**하여 보상금의 **과도한 부동산 시장유입을 방지**

○ **행정·혁신·기업도시 착공**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**밀착점검 및 신속대응체제 확립**

7. 참여정부 로드맵 과제(경제분야)의 마무리

(1) 그간의 추진상황

1 참여정부 출범이후 중장기 경제개혁을 위해 **주요 경제분야 국정과제에 대한 38개의 로드맵과 실천계획**을 마련

<경제분야 주요 로드맵 총괄표>

분야	주요 로드맵	
성장잠재력 확충(12개)	▪ 차세대성장동력사업(03) ▪ 덩어리규제 개선(04) ▪ 토지규제 개혁(04) ▪ 부품소재산업육성(05) ▪ R&D 토탈 로드맵(06) ▪ 서비스경쟁력강화(04～06)	▪ 국가기술혁신체계구축(04) ▪ 중소기업경쟁력강화(04) ▪ 산업자본 금융지배 부작용 방지(04) ▪ 이공계인력 육성·지원(05) ▪ 기업환경개선(06～07) ▪ 비전2030 「2+5」 전략(07)
경제시스템 선진화(6개)	▪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(03) ▪ 노사관계 선진화(03) ▪ 국유지관리제도 혁신(05)	▪ 재정·세제개혁(03) ▪ 자본시장통합(04) ▪ 제로베이스 금융규제개혁(05)
사회통합 /균형발전(8개)	▪ 농·어촌 투융자 계획(03) ▪ 국가균형발전(04) ▪ 사교육비경감(04, 07) ▪ 부동산시장 안정(03～07)	▪ 공공기관 지방이전(03) ▪ 참여정부복지 5개년계획(04) ▪ 희망한국 21(05) ▪ 비정규직 고용개선(06)
동북아경제중심 /대외개방(6개)	▪ 동시다발적 FTA추진(03) ▪ 동북아 물류 허브(03) ▪ 외국인투자유치(03)	▪ 동북아 금융 허브(03) ▪ 경제자유구역(03) ▪ 선진통상국가 구현(05)
지속가능발전과 미래대비(6개)	▪ 공적연금제도 개편(03) ▪ 신재생에너지 개발·보급(03) ▪ 해외자원개발 계획(04)	▪ 남북경협거점 개발(03) ▪ 에너지 원단위개선(04) ▪ 저출산·고령화 기본계획(06)

* ( )는 발표연도

2 **로드맵 과제를 실천 성과 가시화**(5개 로드맵은 이행 완료*)

○ 시장개혁, 노사개혁을 바탕으로 **투명하고 선진화된 경제 시스템**의 토대를 마련

(2007.7.10, 2007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주요내용, 경제정책비서관실)

○ 기술혁신,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과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**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**

* 2006년 :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(03), 덩어리규제 개선(04), 제로베이스 금융규제개혁(05) 완료
* 2007년 : 노사관계선진화(03),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부작용 방지(04) 완료

(2) 하반기 주요 추진계획

◇ **올해 완료 예정인 로드맵 과제**들이 착실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**對국회 협력, 對국민 홍보활동을 강화**

◇ 내년이후까지 계속되는 개혁과제들은 **차기 정부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점검·보완**

◇ 정책·부처별로 **참여정부의 경제성과**를 정리·평가

1 **(하반기 완료 로드맵)** 금년 **하반기 종료예정인 5개 로드맵 개혁 과제**들이 **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마무리 노력**을 강화

○ **경제시스템 선진화**(3개 로드맵) : **자본시장 통합**('04~) 추진, **재정·세제 개혁 로드맵**('03~'07년, 현재 제도정착 단계), **국유지 관리제도 혁신**('05~'07년) 마무리

○ **동북아 경제중심**(1개 로드맵 중간목표 달성) :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('04~'15년) **1단계 목표**(금융허브 기반 구축) 완료

○ **지속발전·미래대비**(2개 로드맵) : **국민연금 개혁**('03~'07년)**과 사회보험 효율성 제고, 에너지원단위개선**('04~'07년) 과제 이행

2 **(입법과제)** 특히, **분야별 로드맵 관련 하반기 입법과제**들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 강화

※ **주요입법 과제**(5개)

① 국가회계법(제정) : 발생주의·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등
② 금융중심지 조성법(제정) : 금융허브추진위원회 설치, 전문인 양성 등
③ 경제자유구역법(개정) : 개발·외자유치 관련 규제완화 등
④ 사회보험통합 징수법(제정) : 4대보험 부과징수 업무 일괄처리 등
⑤ 임대주택법(개정) : 비축용 임대주택 확대 등

3 **(지속추진 로드맵)** 내년이후까지 계속되는 로드맵 과제들은 **차기 정부에서 꾸준히 추진**될 수 있도록 점검·보완

① **비교적 단기간**('09년 이내)**에 종료될 로드맵**은 **개혁과제의 차질없는 집행**에 중점

○ [**차세대 성장동력사업**('08년)] 10개 산업별 기술개발, 사업화 지원, 인력양성 등에 대한 「'08년 종합실천계획」 마련

○ [**희망한국 21**('09년)] 사회서비스 일자리, 장애인 시설 확충 등 단계별 전략을 착실히 추진

② **중장기**('10년 이후) **추진 로드맵**은 정책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계획을 수정·보완함으로써 차기정부에서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종합적으로 점검

○ [**농어업 대책**('17년)] 한·미 FTA 체결 등에 따라 농어업 투·융자 계획(농업 119조, 수산업 12.4조)*의 우선순위 조정

* 보완대책에 따른 추가소요예산은 향후 협의

○ [**동북아 금융 허브**('15년)] 자산운용시장 등 특화금융허브 구현(2단계 목표, '10년)을 위한 세부 실천방안 마련

○ [**국가R&D사업 토탈로드맵**('20년)] 과학기술기본계획('08~'12년)에 로드맵 이행과제들을 체계적으로 반영

○ [**공적연금개혁**(계속)] 공무원·사학·군인연금 등을 개혁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추진

4 **(참여정부 5년 경제성과 평가)** 참여정부가 추진한 **주요 경제정책 내용과 성과를 정리**

○ 주요 정책별(74개)로 **추진배경, 내용 및 쟁점, 향후 필요과제 등을 반영**한 정책백서 작성 추진(정책기획위원회 등)

○ 그밖에 **각 부처별로 주요 정책에 대한 백서도 발간·배포**